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토론회 II

무엇을 지키고 개혁할 것인가

“보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한다”

-Edmund Burke-

Ⅰ 일 시 2017. 7. 18(화) 오전 9시 30분

Ⅰ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Ⅰ 공동주최

여의도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 축 사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개회사

김대식 여의도연구원 원장

■ 토론회

좌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발제

1. 보수의 가치와 노선, 어떻게 바꿀 것인가? ————— 1

박형준 동아대 교수, 前국회사무총장

2. 보수정당의 시대적 역할 ————— 13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 前국회의원

토론

- 1.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 35
- 2.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42
- 3. 오형규 한국경제 논설위원 46

축사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당대표 홍준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9대 대선이 끝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정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가슴 아픈 패배를 맛보야 했습니다.

'보수지지층'은 정권이 실패하고 보수 정당이 분열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큰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디에 가서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수의 위기가 매우 엄중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가 직면한 위기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치'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체질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도 보수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마저 국정 실패를 겪으며 무너졌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자유한국당은 실패한 기득권 세력일 뿐입니다. 그동안 가치로 무장해 왔다면, 이처럼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익'이 아닌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회복하고, 방황하는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무엇을 지키고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는 '수구', '웰빙'이라는 피비우스의 띠를 깨트려야 합니다. 뼈아픈 반성과 과감한 희생, 성찰의 토대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제대로 혁신하고 보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좌장을 맡아주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박형준 前국회사무총장님, 나성린 前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양승함 교수님, 송평인 논설위원님, 그리고 오형규 논설위원님께도 보수정당의 개혁 방안에 대한 기탄없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명하신 교수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시민사회 보수지식인들이 어렵게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자유한국당, 나아가 한국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변화에 대해 발전적 논의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홍준표**

축사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입니다.

먼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여의도연구원 공동으로 진행 중인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 토론회 두 번째 순서로 ‘보수는 무엇을 지키고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척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발걸음 해주신 박형준 前국회사무총장님. 그리고 저희 당의 정책통이신 나성린 前의원님, 귀한 발제를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님,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님, 오형규 한국경제 논설위원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김대식 원장님을 비롯해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한국 보수 그리고 보수정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보수 궤멸론에 불을 지피고 있으며 보수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조차 이제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보수는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을 잃어버린 돛단배처럼 그저 파도에 몸을 싣고 떠도는 신세가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보수는 안팎으로 혁명에 준하는 쇄신과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대의 흐름에 둔감했고 변화 발전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아주 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정당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보수이념을 좇기 보다는 기득권과 이익을 추구했고 변화하기 보다는 수구적인 행태를 반복하면서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개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보수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진정성 있게 지켜내는 진품(眞品) '보수이념 정당'이 돼야 합니다.

모쪼록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 토론회가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재정립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보수정당 탄생의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 우 택**

개회사



김대식
여의도연구원 원장

반갑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 김대식입니다.

‘보수, 무엇을 지키고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사 좌장을 맡아주신 윤창현 교수님(서울시립대) 그리고 발제자로 나서주신 박형준 교수님(동아대), 나성린 교수님(한양대), 토론에 참여해주신 양승함 명예교수님(연세대), 송평인 논설위원님(동아일보), 오형규 논설위원님(한국경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 토론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의도연구원장에 취임한 후 사실상 첫 공식행사라 그런지 제 개인적으로도 더욱 의미가 새롭습니다. ‘보수의 미래를 다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지난 첫 토론회에서 여의도연구원과 자유한국당이 귀담아 들어야 할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켜야 할 보수 이념이 없는 탓에 최근 선거 공약을 보면 일부 안보 이슈를 제외하고 정책이 다른 정당과 거의 유사하다.” “보수=수구’ 프레임을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온고이지신이라는 보수 원칙의 틀에서 자기 혁신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 “보수 리더십 재구축 위해서는 보수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자기 정당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모든 정책과 행동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등 한국당에는 뼈아픈 지적이자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제기된 내용을 보다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 일본의 나카소네 前 총리는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등 보수 자민당의 몰락과 부침을 진단하며 <보수의 유언>이라는 책을 통해 “진정한 보수는 원칙을 지키며 끊임없이 개혁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당시 일본의 정치상황과 지금 우리 정치상황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치 원로가 보수정당의 위기 상황에서 던진 두 가지 질문 즉 ‘보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수 정치인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는 것처럼 보수가 자성과 성찰을 통해 보수의 힘을 한데 모으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의도연구원은 보수의 저력을 한데 묶어내는 ‘싱크 넷’(Think-net)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보수우파의 기치아래 모두의 힘을 한데 모아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인재 네트워크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잘’ 듣는 경청의 지혜라고 봅니다. 경청은 “이야기할 권리를 가능한 한 상대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목소리는 낮추고 다양한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잘 들겠습니다. 특히 보수 우파 지식인, 연구소, 시민단체, 오피니언리더, 신선한 정책아이디어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든 제가 직접 찾아가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들겠습니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보수우파의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바로 세우는 ‘보수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수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가치가 무엇이고, 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대 식**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토론회 II
무엇을 지키고 개혁할 것인가

발제 1

보수의 가치와 노선,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박형준 (동아대 교수)

보수의 가치와 노선,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박 형 준 (동아대 교수)

I. 무너진 보수, 무엇이 문제인가?

- 자유 한국당의 경우

1. 반성과 책임이 없다!

“원래 보수는 사려 깊게 일을 처리하고, 열정보다는 책임을 중시하는 태도를 미덕으로 삼는다. 헌데 공천 파동과 총선 패배, 국정 농단과 탄핵 사태, 대선 참패를 겪으면서도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도 물으려는 사람도 없다. 과거에는 보수 정당이 위기 때마다 혁신의 몸부림을 하곤 했다. 사람도 바꾸고 정강도 바꾸었다. 지금은 시늉만 있을 뿐이다.”

2. 기득권 지키기 체질이 뿌리 깊다!

“혁신이 없으니 당연히 기득권 챙기는 밥그릇 싸움에만 열심이다. 당 대표는 측근들로만 당직을 채우고, 당권 강화에만 집중한다. 과거에는 초재선 의원들이 정풍운동도 하고, 당내 민주화를 주도하기도 했지만, 어찌 된 셈인지 지금은 변화를 위해 결기를 보이는 인물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직을 즐기는 사람들로만 딱 차 있는 것으로 비친다. 국회의원인지 회사원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그래서 나온다.”

3. 극우 성향의 영남 60-70 정당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좌파에 대한 분노를 동원 자원으로 삼아 영남 헤게모니와 고령 세대 헤게모니에 안주하는 경향이 짙다. 젊은 세대들이 외면하고, 수도권에서 외면당하는 정당이 미래가 있는가? 좌파 진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에만 의존하는 정당이 미래가 있을 것인가?

4. 무엇을 바꿀 것인가?

결국 노선과 체질의 혁신, 인물의 쇄신과 발굴밖에 없다!

노선에서는 보수 교조주의를 넘어서야 함.

박정희 시대의 프레임, 반공/국가주의/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야 함.

이것은 강령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선의 해석과 체현의 문제임.

▶ 이미 한나라당 2004년 뉴비전위원회 강령과 2005년 혁신위원회 정강 혁신을 통한 공동체 자유주의 채택 이후 강령 수준에서는 많은 혁신이 있었으나, 문제는 문서 위의 노선과 현실의 노선 사이의 괴리

-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미래의 가치와 결합할 것인가가 핵심
 - 과거 지향적인 보수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보수임이 노선 상 명확해져야 함.
‘과거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해야 함.
- 새로운 노선은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만 체현될 수 있음.

“민주주의의 연륜이 깊은 나라의 보수 정당 역사를 보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대동소이하다. 선거에 연거푸 패하거나 보수 정당의 존립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두 가지 길을 반드시 했다. ‘노선의 현대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발굴’이었다. 1950년대 사회민주주의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 때 영국 보수당은 중도주의자 헤럴드 맥밀런을 앞세워 ‘온정적 중도보수주의’를 내걸고 성장의 필요와 분배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노선으로 집권했다. 반면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말까지 대부분 시기를 노동당이 집권하던 시절, 절치부심하던 보수당은 소신과 결단력을 지닌 대처를 내세워 ‘영국병 해소와 시장 활력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집권해 영국의 힘을 되찾는다. 노동당이 제3의 길로 토니 블레어를 앞세워 장기 집권한 90년대 이후 또 위기에 빠진 보수당은 캐머런이라는 스마트한 청년 지도자를 앞세우고, 보수당 판 ‘제3의 길’로 재집권에 성공해 오늘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점은 보수 정당의 원로 지도자들이 ‘당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 서 당의 현대화와 새로운 지도자의 발굴에 팔을 걷어붙이곤 했다는 점이다. 당에 새로운 물질을 터주면서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원숙한 보수주의자들의 특별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인 것이다.

어떻게 우리 보수정당에는 이런 정치지도자 한 사람 볼 수 없을까? 오히려 최후의 일각 까지도 알량한 힘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노추의 정치인’들만이 눈에 띈 뿐이다.

혁신은 외면하고 반사이익만 기다리는 보수, 시대의 변화를 성찰하지도 이끌지도 못하는 보수는 수구 보수일 뿐이다. 그들은 과거를 지키기 위해 미래를 희생한다. 그들은 역사의 개척자가 아니라 걸림돌이다.”

II. 현대 정치에서 보수주의

1. 보수주의의 모호함과 다양성

▲ 한나 아렌트(H. Arendt)는 보수란 그 유래에 있어서나 참으로 그 정의에 있어서나 논쟁적인(polemical in origin and indeed almost by definition) 개념이라고 규정

- “보수주의를 상표 붙인 병에 넣은 것은 공기를 액체로 만들려는 시도와 같다”
- 보수주의는 어떤 총체적 이념이나 하나의 기원을 갖는 이론에 의해 ‘교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가치와 태도의 구성물로 구축된 것. 연역적이기보다는 귀납적이고, 이상주의적이기보다는 현실주의적이며, 급진적 변화보다는 질서 있는 변화를 중시하는 태도

▲ 따라서 나라마다 보수주의는 다른 정체성과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음.

- ‘나라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보수주의가 있다’

2. 영국의 보수주의

영국에서 에드먼드 버크를 비롯해 보수주의의 발전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급진 혁명/개혁주의의 파괴적 행동이 갖는 부작용과 해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전통과 역사의 축적물에 대한 존중, 현실에 대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분석과 판단, 점진적 누적적 변화를 통한 상황의 개선 등을 중시하는 사상 체계로 발전

“영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정치”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개혁 정치, 헤럴드 맬린런의 온건 중도보수주의, 대처의 ‘신자유주의’, 캐머런의 ‘온정적 보수주의’는 모두 시대의 맥락에서 보수의 정치철학을 견지하면서 노선 혁신을 통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려는 노력

3) 미국에서 보수주의는 초기 해밀턴주의(연방주의/강한 정부/중앙집권파), 제퍼슨주의(자유/작은 정부/지방분권) 대립에서 해밀턴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후 정치적 혼돈과 합종연횡을 거쳐 19세기 말 진보운동에 대한 대립으로 공화당이 보수주의를 표방, 1960년대 골드워터 보수개혁운동/레이저니즘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작은 정부/힘에 의한 외교 등 우파 보수주의로 재정립

Ⅲ. 한국의 보수주의

1.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

한국의 보수주의는 일제 시대에는 이승만, 안창호, 김구, 3.1 운동 33인 등등 민족주의/민족계몽운동 계열에 기반을 두고 있고(그 중 상당수가 친일 부역을 했다는 점에서 친일파로 매도되지만, 그 정신적 뿌리는 계승), 그 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반일’과 ‘반공’이 주요한 정체성의 원천

한국의 보수주의가 전통(조선 시대)으로부터 무엇을 계승했는지는 분명치 않음. 단, 조선의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와 유교적 가치관의 역사적 DNA가 내재화

- 왕정 질서와 대통령 체제의 유비(兪比)

2. 해방 이후의 보수주의

해방 이후엔 냉전형 분단체제와 6.25 전쟁의 영향으로 북한 및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미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보수주의의 핵심적 질료를 형성함.

- 미국 정치경제체제의 가치와 이념을 보수의 준거 기준으로 삼게 됨.

- ‘자유’, ‘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공화주의’를 보수의 이념으로 채택, 그러나 분단 및 전쟁, 빈곤의 현실에서 한국의 보수주의는 그런 이상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러한 가치로부터 이탈함. 즉, 박정희 시대 이후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모델에서 한국의 보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공화주의보다는 국가우선주의, 성장제일주의, 공리주의를 우선함.
- 이 과정에서 보수의 분화가 일어남.
- 권위주의적 국가주의 보수와 자유민주주의적 보수의 분화
- 전자는 강력한 리더십 = 제한된 민주주의,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모델로서 한국형 고도성장모델을 성취 = ‘한강의 기적’과 ‘산업화의 자긍심’이 보수의 DNA로 자리 잡음. 후자는 양김과 보수 야당으로 재정립. DJ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 야당세력은 진보세력으로 전화해서 오늘의 진보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함.
- 한국 보수의 비민주 기득권 이미지는 권위주의적 국가주의 보수의 군부독재, 정경유착 등의 부정적 유산에 기인

IV. 87년 체제 이후 한국 보수주의의 재정립

87년 이후 정치적 구도가 독재/민주의 구도에서 보수/진보의 구도로 전환해나감. 이 과정에서 국가주의적 보수와 자유주의적 보수가 재결합 = 91년 3당 합당과 문민정부의 수립

- 이후 한국의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적 전환을 시도. 현대사에서 보수주의의 준거 기준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공화주의에 충실한 보수로의 회귀 및 전환을 의미. 여기에 세계사적 신자유주의 물결이 함께 결합
- 개혁적 보수란 바로 이 흐름을 착근시키고 확장하려는 운동
- 한나라당 혁신 강령에서 규정한 발전적 보수와 공동체 자유주의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고, 적어도 강령 상으로는 현재의 보수정당들의 기본 가치로 자리 잡음.

V. 한국 보수주의의 부정적 잔재

자유주의적 보수로의 전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 정치세력 및 전통적 보수층의 정치의식 및 행동양식에는 성장지상주의, 물질주의적 공리주의, 가족주의, 국가주의, 연고주의, 엘리트주의가 강하게 잔존

- 이 과정에서 선진국가의 보수의 품격을 구성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관용성 (tolerance), 포용성(inclusiveness),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문화적 생동력(vitality)은 구현되지 못함.
-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다가오는 이유
“고리타분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경쟁과 노동윤리만 강조하는 이미지”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국정농단사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는 보수의 세 가지 이념적 축에서 모두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줌.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적 보수로의 회귀 경향

정치적 자유주의 = 전체주의에 대한 단호한 비판과 배척
≠ 국정 교과서 발상

경제적 자유주의 =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 공정경제로서의 경제민주화 폐기, 자본의 자유를 재벌의 자유로 치환

민주주의 = 대의제 민주주의
≠ 의회에 대한 행정부 지배의 옹호(국회법 파동)

공화주의 = 권력의 자의적 사용 금지와 책임 정치, ‘자유외 보루로서의 법치’와 Due Process
≠ 국정 농단

VI. 보수의 이념과 가치에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새로 넣어야 하는가?

1. 기존의 전통 속에서 버려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

(1) 버려야 할 것

권위주의적 국가주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없는 기득권 안주와 편협한 엘리트주의

지나친 공리주의와 물질우선주의

좌파 포비아에 기초한 교조적 태도

(2) 살려야 할 것

‘반공’에 녹아 있는 전체주의에 대한 단호한 반대 = 자유의 가치의 우선성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대한민국 현대사의 놀라운 성취에 대한 자긍심

안보와 경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접근과 대안 중시적 태도

2. 새롭게 추구해야 할 것

(1) 정치적 자유주의의 재정립

- 시민권과 사회적 정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자유주의 이념의 재구성

-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나아가는 정치적 자유주의

부당한 권력의 간섭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를 넘어 개인의 자아 실현과 행복을 구현하는 자유를 구현하는 이념

- 포용의 가치와 자율의 가치를 존중

≠ 좌파의 집단주의에 기초한 평등 논리

(2) 국가경영 모델의 전환

- 국가의 총량적 발전 중심 개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놓는 국가경영

- 군림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효율적인 정부, 관료적 엘리트주의의 극복

- 국가 모델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수적임
발전국가 이후의 국가 모델은? = 공진국가
“마치 작은 정부인 것처럼 세금을 거두고 큰 정부처럼 세금을 쓰는 모델의 극복”

(3) ‘공화주의’의 재구성

- 권력의 자의적 행사의 금지와 이를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
- 책임에 기초한 정치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통합을 중시하는 정치

(4) 윤리적 보수와 중용의 정치

- 기득권 버리기와 노블리스 오블리제
“보수 정치인이 자리만 탐내는 정치인, 회사원으로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 윤리적 보수로 거듭나기
막스 베버의 소명윤리와 책임윤리의 재인식
- 국민에 대한 수오지심(羞惡之心), 측은지심(惻隱之心), 공경지심(恭敬之心)의 동양적 도덕감각의 회복
“공천과정과 국정농단사태에서 친박 주류세력이 보여준 태도는 서양적 정치 윤리 기준(Max Weber)으로서 소명의식도 책임윤리도, 동양적 정치윤리로서 국민에 대한 수오지심, 측은지심, 공경지심도 없는 친박한 비윤리적 보수의 민낯을 보여줌”
- “화살이 과녁을 벗어나면 돌아보아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중용)

▲ 새로운 보수의 가치로서의 중용의 정치

- 중용의 정치란 동태적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여 미래를 향한 옳은 길을 만들어내는 것, 시시비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리되 선입견(이념이든 감정이든)으로

재단하는 것을 피하는 것

- 時中의 정치 - “때맞춰 중화하다”
- 상황에 대한 사려 깊은 인식과 통찰력, 문제 해결을 위한 파괴적 수단이 아닌 적절한 수단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미래지향적 개혁 보수의 길은 중용의 정치를 통해 가능
- 보수와 진보 사이에 루비콘 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간극은 좁혀질 수 있다.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 역사가 보여주는 과정이며, 연정과 협치의 기반이 되는 것임.
예) 헤르츠 개혁, 네덜란드 노동개혁 등
- 정책의 수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수립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경쟁으로 전환해야 함.

(5) 문화적 심미적 자유주의

적극적 자유는 삶에 대한 해석적 심미적 능력의 확장을 통해 구현

개인의 차원, 공동체의 차원, 국가의 차원에서 문화의 질을 높이고 보수 정치가 높은 문화적 심미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

보수의 품격은 문화적 보수에서 유래하나, 한국의 보수의 ‘꼴통 이미지’는 ‘문화 없는 지나친 물질주의’ 경도에서 비롯된 것임.

-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정당이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 문화적 심미적 자유주의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적극 영입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또 정당 자신의 고리타분함을 던지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강구되어야 함.

VII. 미래의 가치를 담고, 미래의 비전을 세워라!

- Big Picture가 중요하다!

지금 이 시대는 상투적으로 말하는 ‘문명의 전환 시대’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 국가와 세계, 자연과 지구환경에 대한 근원적 전환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질적 ‘문명의 전환 시대’

- AI가 가져올 전환
- 기후변화가 가져올 전환
- 글로벌 가버넌스가 가져올 전환
- 세계경제의 틀과 성격 전환 등

이런 문명의 전환을 시야에 넣고 30년 이후, 50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비전과 정책을 짜야 함.

- 1)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나, 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 2)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 3) 초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영위되어야 하나?
- 4)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어떤 시민, 어떤 인재로 키워야 하나?
- 5) 주권과 안보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통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 6) ‘지구 조국’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고,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면서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에 부합하는 현실 정책들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래지향적 보수 정당의 노선
- YS 시대의 세계화 정보화 비전은 이런 미래지향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토론회 II

무엇을 지키고 개혁할 것인가

발제 2

보수정당의 시대적 역할

나 성 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특훈교수,
부산대 경제통상연구원 석좌교수,
(사)경제위기관리연구소 이사장)

보수정당의 시대적 역할

나 성 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특훈교수, 부산대 경제통상연구원 석좌교수,
(사)경제위기관리연구소 이사장)

I. 머리말

- 2017년 5월 9일 대선참패와 함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침몰하였다.
 - 이 침몰은 이미 예견되었었다. 박근혜정부의 연이은 국정실패,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탄핵·구속, 보수정당의 분열과 보수 대통령후보의 부재 등을 거치며 보수정당에 대한 다수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
 - 좌파세력의 잘 기획된 촛불작전은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질렀고, 1년 가까이 계속된 이 분노의 축제는 보수정당을 침몰시켰던 것이다.
- 그러나 보수정당의 침몰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를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세계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보수주의의 침몰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박근혜정부의 실패와 그것을 막지 못한 보수정당의 실패이지 그것이 이 땅의 보수주의의 침몰은 아닌 것이다.
- 자유한국당이라는(바른정당 포함) 보수정당의 실패는 보수의 장점인 스스로의 개혁을 방기한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다.
 - 우리는 이미 2011년에 보수정당의 위기를 맞이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2010년 지방선거참패와 2011년 서울시장보궐선거의 패배를 경험하며 2012년에 있을 양대 선거(총선, 대선)의 패배를 예감하며, 당 전체가 개혁의 몸부림을 시작하였다.
 - 당시 여의도연구소는 ‘한나라당의 뉴비전(나성린 비전위원장)’을 발표하면서 중도보수정당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였고, 젊은 개혁파의원들이 박근혜비대

- 위원장을 설득하여 중도보수로의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당명, 당색깔과 당로고까지 바꾸었다.
- 그 결과 2012년 4월 총선에서 겨우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그해 말 김종인위원장을 영입하여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를 채용하여 2012년 대통령선거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
- 그러나 그 이후 박근혜정권의 불통, 친박패권주의, 계속된 인사실패, 중도보수주의로의 혁신 방지, 2016년 총선 공천파동 등의 오만의 극치를 보인 끝에 스스로 개혁해야 살아남는다는 보수의 원칙을 저버림으로써, 2017년 5월 9일 보수정당의 대몰락을 자초한 것이다.
- 사실상 현재 우리가 직면한 작금의 위기 상황은 2011년 한나라당이 겪었던 위기상황의 테자뷰이다. 다만 그 위기의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차이이다.
-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리 보수정당이 이러한 참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만큼 녹록치 않다.
- 지난 5.9 대선기간동안 모든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했듯이, 여전히 우리는 위기상황에 놓여있고, 준비 안 된 채 운 좋게 집권한 문재인 좌파정권에 이 나라의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는 것이다.
- 다음에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보수정당이 해야 할 시대적 역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II.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1. 박근혜정부의 실패와 보수세력의 몰락

- 박근혜정부의 친박패권주의, 불통과 인사실패에서 시작 → 2016년 오만한 총선 공천파동과 총선 참패 → 최순실 국정농단과 탄핵과 분당 →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 → 2017년 대선참패와 정권 상실 → 보수세력의 대몰락

2. 실패할 수밖에 없는 좌파정부의 질주: 여론조사 정치

○ 경제정책의 실패는 볼 보듯 뻔함

- 대선공약과 정부출범 후 경제정책으로 볼 때 반시장적, 대중인기영합적, 막대한 자원 소요되는 실현가능성 낮은 정책들이 대부분:
 - 반시장적: 소득주도 성장론, 과도한 경제민주화와 상법개정, 노동존중(실제론 노조존중) 사회 실현, 파격적인 근로시간 단축, 노조가입률 제고, 공무원과 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공기업 성과평가제·성과연봉제 폐지,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회의소 신설, 무리한 비정규직화, 생활임금제 확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 대중인기영합적: 공무원 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강성노조의 기득권 보호, 사회복지지출 확대, 재벌 때리기, 무조건적인 을의 보호
 - 실현가능성 낮은: 공적임대주택 연17만호 공급과 도시재생 뉴딜,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부채탕감.
- 반면에,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들은 과거정부의 재탕이고 빠른 성과달성이 어려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코리아 구현(cf.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제조업 부흥과 산업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과학기술 진흥.
- 경제정책 핵심부서에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사회수석, 공정거래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모두 반시장, 반기업 정서가 강한 사람들.
 - 빠른 시간 내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경제성장률이 지지부진할 경우, 국민들의 지지가 급격히 하락할 것임.

○ 준비 안 된 문재인 정부의 불통정치와 운동권세력의 청와대 인적구성이 초래할 실패는 시간문제

- 자신들이 제시한 인사5원칙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투성이 인사들을 장관으로 추천해놓고,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내로남불), 여론조사 수치를 거론하면서 임명 강행 → 협치의 부재
- 내각과 청와대 핵심 요직에 좌파운동권과 좌파시민단체 출신 장악: 임종석,

신동호, 백원우, 한병도, 윤건영, 송인배, 유송화, 장하성, 홍장표, 김수현, 김상곤,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김현미, 김상조, 등

3. 물 건너간 선진국의 꿈과 향후 닥칠 경제적 재난

○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이미 물 건너갔다

- 10년 이상 1인당 국민소득 20,00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진국과의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국민소득 30,000\$대 진입 상당기간 불가능, 설령 진입한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기준은 1인당 국민소득 40,000\$로 상향조정되어 있을 것임(명목소득이기에).
- 모든 선진국이 선진국 진입 후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는 중진국 단계에서 이미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 성장잠재력 급격히 하락.
- 잠재성장률 이미 2%대로 추락: 사람의 양과 질, 자본의 양과 질 하락으로 인해.
- 사회복지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조세 수입 급격히 감소하여, 미래세대의 세부담 급증 → 경제활동 인센티브 급격 하락 (근로이익, 투자이익)

○ 가계소득과 국민소득의 증가 속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가계소비와 (방만한 사회복지 증가로)정부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에,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저출산과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공적연금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다 → 미래 세대의 세부담은 경제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4. 촛불잔치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좌파와 젊은 세대

○ 박근혜정부의 실정과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망한 젊은 세대들은 좌파의 잘 기획된 촛불잔치에 동참하여 혁명을 해내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으나, 그들이 좌파 정치세력(민노총, 전교조, 좌파시민단체)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음
- 정권교체는 필요했으나 그것이 그들을 위한 올바른 정권교체였을까?

- 촛불에 의한 정권교체는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고, 문재인정부 또한 그러한 광장민주주의에 의해 교체될 수 있음을 의미 - 광우병파동과 한미FTA반대운동 또한 촛불세력들이 주도한 광풍으로서, 우리 경제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그 손실에 대해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 조만간 현실화될 좌파정부의 실패에 대해 좌파들은 결코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그 실패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이용당한 젊은 세대의 몫으로 돌아 올 것이다(취업난, 고실업율(cf. 서구유럽국가의 높은 청년실업률(50%), 막대한 세부담) → 촛불 고지서.

5. 이념집단의 변화, 젊은 층의 다수화와 기울어진 운동장

- 이념집단 분포의 변화
 - 과거(보수(40%), 중도(30%), 진보(30%)) → 최근(보수(30%), 중도보수(20%), 중도진보(20%), 진보(30%))
 - 전교조·386세대(55세 이하): 총투표권자의 65% + 상승하는 젊은 층 투표율 → 기울어진 운동장

Ⅲ. 2017년 현재의 시대적 요구

-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국민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 이 불확실성과 불안감의 근원은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취직난, 실업, 가계부채, 내집 마련, 전월세난), 불평등과 빈곤, 자녀교육, 노후에 대한 준비부족, 등이다.
- 2017년 대선에서 각 당의 구호도 이러한 불안감을 겨냥하여 ‘일자리창출’, ‘불평등의 해소’, ‘경제민주화’, ‘적폐청산(좌파도 적폐청산 대상)’, 등이 주조를 이루었다.
 - 그러나 어느 정당도 이 난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못했다. 만약에 그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일 뿐이다.

- 지금처럼 세계경제침체가 계속되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진 국제경제환경 하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전무하고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가, 이 어려운 난제들을 자기 뜻대로 해결하긴 매우 어려운 것이다.

→ 그러나, 우리 보수우파는 우리가 이러한 난제들을 좌파보다는 확실하게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 따라서 2017년 현재의 시대적 요구는 모든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두 가지이다.

(1) **경제살리기/선진화 재가동**: 단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불안 해소), (최선의 복지인 일자리와 늘어난 세수로 사회복지를 확대함으로써)불평등을 완화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체질 강화하는)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흔들리는 대한민국號의 중심 잡기**: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좌파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좌파의 일방적 독주 막기, 좌·우파 적폐청산, 국민 대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호의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보수정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개혁적 중도우파정당의 재건”**이다.

IV. 보수정당의 시대적 역할: “개혁적 중도우파정당의 재건”

1. 보수란 무엇인가?

○ 진정한 보수는 기존 체제의 좋은 점을 유지하고, 점진적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계승발전 시키려는 성향이다.

■ 이를 위해서 보수는 애국, 책임, 의무, 자기희생, 봉사, 공정, 등을 강조한다. 보수진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대한민국을 보존해 왔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만든 사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믿는 사람들이다. 정부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더 믿는 사람들이다. 바로 우파다. ≠ 잘못된 기존체제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보수.

↔ 진보는 기존체제의 문제점을 개혁해 새로운 체제로 바꾸려는 성향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는 시장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더 신뢰하고 성장과 효율보다는 분배와 평등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바로 좌파다. ≠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북한의 공산독재체제를 옹호하는 수구좌파.

○ 우리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북한이나 구공산권에선 그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이 보수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세력이 진보였다.

→ 따라서 **우파와 좌파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

○ 참 우파는 동족을 계급으로 구분하거나 투쟁을 선동하지 않는다. 부자와 빈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학생들은 일류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되기를 원하는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 할 수 있는 여건을 공정하게 만들어 주는 정부, 그리고도 태생적 한계로 뒤쳐진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나라, 이것이 참 우파가 원하는 사회고 나라다. 부자를 끌어내리고 대기업을 증오하도록 선동하고, 일류대학을 없애므로써 모두를 하향평준화하려 하지 않는다.

2. 보수의 진정한 가치 알리기

○ 세계사에서 우파의 우월성

- 20세기 1세기 동안 자본주의 우파와 공산주의 좌파가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결국 좌파는 철저히 패배하고, 우파의 승리로 귀결
- 좌파노선을 채택했던 구동구권, 남미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모두 최빈국으로 전락하거나 체제 전환.

○ 대한민국에서 우파의 역할

- 한국도 우파 남한과 좌파 북한으로 분단되었으나, 남한은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했고 북한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

○ 박근혜정부의 실패가 보수의 실패는 아니다

- 지금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박근혜정권의 실패 때문이다. 사람들은 박근혜의 실패를 보수의 실패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지 않았다. 따라서 박근혜의 실패를 보수의 실패와 동일시해선 아니 되는 것이다.

-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소통의 부재, 폐쇄적 인사(친박 내)의 실패, 패권주의(친박, 진박), (능력 안 되는)비선실세 활용과 국정 농단

- 애국, 책임, 의무, 자기희생, 봉사, 공정, 공동체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 자기혁신을 통해 공동체를 더 강하게 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 했다

↔ 인사혁신(친박내 회전문인사, 인재키우기/미래지도자 키우기), 정책혁신(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개발), 이념혁신(중도로의 외연 확대)

○ 보수살리기의 주체

- 주체: 보수정당, 보수지식인단체(싱크탱크), 보수시민단체

3. 보수정당 실패의 원인

- 오랫동안 안보정당, 기득권층 지지 정당으로 인식되어 왔다.
 -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으로, 선거 때마다 안보위기의식 조장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재벌, 고소득층, 갑을 위한 정당으로 오해 - (오도된)감세정책,
 - ↔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 부패, 오만, 소통부재, 봉사과 자기희생의 부족, 전투력의 부재

- 보수철학의 빈곤: 보수정당의 국회의원과 구성원들이 과연 보수주의를 이해하고 있는가?

- 선거전략의 부재
 - 재외국민투표제: 보수정당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납세·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 → 절대적 열세 초래
 - (2일간의)사전투표제: 투표 당일, 젊은층의 막판 결집을 두려워해 투표시간 연장 (오후6시 → 8시) 대신, 이틀간의 유비쿼터스식 사전투표제 도입 → 절대적 열세 초래
 -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대한 대책?

- 인재를 키우지 않는다: 청년·여성정치인 키우지 않고, 내부의 상처 입은 전사들 핑개 치기, 여의도연구원장에 현역의원 임명.

- 내부에서 서로 총질을 한다
 - 친이-친박 논쟁, 친박-비박 논쟁. 진박공천 파동

- 우군세력을 키우지 않는다

- 전문가, 시민단체, 문화단체, 대중예술인 - 필요할 때만 일회용으로 이용하고 내팽개치는 소모품 취급

○ 실패한 공천개혁

- 2016년 4.13공천에서 무조건적인 상향식 공천(내부 싸움으로 서로 적이 되고 본선경쟁력 하락)과 전략공천의 부재 → 총선 참패
-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석패율제에 대한 대책?
- 아직 대선패배의 백서 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4. 개혁적 중도우파정당의 재정립: 가치정당·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 정당이란 동일한 가치이념을 공유한 사람들의 정치적 결사체

→ 과연 우리나라 보수정당이 진정한 가치정당인가?

○ 중도우파 이념의 재정립

- 우리나라의 이념지형이 보수 우위에서 중도-진보 우위로 변화하였다
- 따라서, 보수우파정당의 이념 또한 중도보수로 이동해야 국민눈높이에 맞출 수 있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 중도우파이념서 발간(외부, 전문운동인들 주도)
 - 중도우파정책서 발간(외부, 전문지식인들 주도)

■ 중도우파이념의 재정립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자유민주주의와 따뜻한 시장경제
- 성장 → 포용적 성장: 성장과 복지의 조화, 성장과 분배의 조화, 성장의 혜택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 “복지의 원칙” 정립
 - ▲ 성장의 목적은 복지
 - ▲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

- ▲ “중부담-중복지” 원칙: 현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30년경에 가면 현재 OECD국가의 평균복지수준에 도달하게 됨. 자원이 전무하고 선진국이 아닌 국가로서 고부담-고복지는 달성 불가능.
- ▲ 절대적 빈곤의 완전 제거
- ▲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애 맞춤형 복지제도” 완비
- ▲ 보편적 무상복지 → (어려운 소득계층을 위주로 하는) 맞춤형 선별적 복지에 집중 →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점진적으로 목표계층 확대.
- ▲ 다만, ‘복지와 재분배를 통해 성장을 달성’ 한다는 허위주장에 대해선 단호히 배격.

- “경제민주화의 원칙” 정립

- ▲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재벌의 불공정거래와 경제적 갑의 갑질 근절로 규정했고, 좌파는 재벌해체 또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적 을의 보호로 규정했다.
- ▲ 재벌(대기업 포함)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확실히 하고, 재벌의 국제경쟁력에 심대한 훼손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선별·조정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사외이사 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中.
- ▲ 경제적 갑의 갑질 해소 - 여전히 가맹본부의 갑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프랜차이즈법의 보강 필요.

○ 보수가치의 진정한 실현

- 애국, 책임, 의무, 자기희생, 봉사, 공정, 공동체와 같은 보수가치의 상시 실천
 - 사회적 약자와 세계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 강화: 현재 인권은 좌파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으나, 자유주의자들은 천부인권 주장.

- “천막당사”로 돌아가서 고생하는 모습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
 - 매주 전국적으로 지구당별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 국회의원은 월급의 10%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 정책혁신: 확고한 중도우파정책의 정립과 “정치적으로 옳은(politically correct) 정책” 공약
- 기본적으로:
 - 우파이념이 좌파이념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자유민주주의와 따뜻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복지를 강화하는 우리의 정책이 옳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 우파의 정책이 사회적 약자(서민, 노동자, 자영업자, 등)를 위해 더 우월하다는 믿음을 가져야한다: 좌파정책은 공산주의처럼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경제를 어렵게 하여 일자리를 줄이고 국민소득을 감소 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을 더 어렵게 한다.
 - 우파 정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부자정당, 기득권정당, 부패정당, 안보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러한 믿음의 바탕위에, ‘경제적으로 옳은(economically corret) 정책’을 고집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옳은(politically correct)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 ‘경제적으로 옳은 정책’은 분명히 국가경제를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 다수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혜택 받는 국민들은 고마움을 나타내지 않고, 과도기적으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혜택의 상대적 크기가 작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정책실천자들에게 정치적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정치적으로 옳은 정책’이란 경제적으로 옳은 정책에 비해 국가경제 전체에 주는 이익은 적지만 손해 보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크게 함으로써 정책실천자들에게 정치적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정책을 의미한다.

- 감세정책: 감세정책은 모든 소득계층과 모든 기업에게 감세를 해줌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소득을 높이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허위선전에 의해 부자감세로 오해되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 처음부터 부자와 대기업을 제외하고 감세를 한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정책'이었다. 그 외에도 누진세구조의 특징에 의해 부자와 대기업을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었기에.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이 정책은 분명히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면서 세수를 더 확보하는 경제적으로 옳은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오도되었었다 → 제도 도입 전부터 매월 원천과세액을 미리 증가시킨 후 점진적으로 추진했었으면 '정치적으로 옳은 정책'이었다.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고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경제적으로 옳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에서의 오해로 인해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 처음부터 의료산업의 영리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도입했었으면 '정치적으로 옳은 정책'이었다.
- 노동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가져옴으로써,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박근혜정부 시절 결국 도입되지 못하였다 → 처음부터 노동시장선진화 5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자보호법)을 다 통과시키려 하지 말고, 노조와의 타협을 통해 가능한 법부터 통과시켰으면 '정치적으로 옳은 정책'이었다.
-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반감을 사서 공무원들의 표를 결정적으로 잃은 정책이었다 → 처음부터 기존 공무원들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또는 고액연봉자들만 기여금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개혁하는 게 '정치적으로 옳은 정책'이었다.
- 공공부문 성과평가제와 성과연봉제, 무상보육/유보통합, 청년수당, 담배소비세 인상 등도 마찬가지.

○ 인적혁신

- 양대 선거 실패의 핵심책임자들 정계은퇴 선언/21대 총선불출마 선언,
- 전투력있는 우파전사의 육성,
 - 중도우파정당은 우파이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전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그냥 국회의원 한번 하기 위해서, 직업 정당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선 들어 온 사람으로 구성되어선 안 된다.
 - 2016년 4.13총선에서 공천파동에도 불구하고 험지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노하우를 모아서(백서 발간) 활용해야 한다.
 - 연수원을 마련하여 국회의원과 당원의 이념·정책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야 하고 이념교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폐교 구입.
- 젊은 지도자 발굴 및 양성
 - 영국의 토니 블레어(41세, 노동당 당수), 윌리엄 헤이그(36세, 보수당 당수), 데이비드 캐머론(39세, 보수당 당수), 마가렛 대처(50세, 보수당 당수), 존 메이저(47세, 보수당 당수), 미국의 오바마(47세,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46세, 미국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 롱(39세, 앙 마르슈 당수),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42세, 자유당 당수), 이스라엘의 베나민 네타냐후(44세, 리쿠르당 당수) 같은 3~40대의 젊고 매력 있는 정치지도자를 찾아서 국민에게 신선함을 주어야 한다. ↔ (예: 김세연(45세), 김용태(49세), 오신환(46세), 홍정욱(47세), 이준석(32세))

○ 조직혁신

- “사이버 정당”으로 대변신해야
 - 대다수 국민이(십지어는 실버세대들까지) SNS로 소통을 하는 시대에, 구시대적 오프라인 조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됨.
 - 사이버조직을 강화하고, 100만 사이버전사를 양성해서, 사이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 당의 조직과 운영체계,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사이버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 지구당 재정비: 참신한 우파전사들로 지구당 당협위원장 재배치 필요
- '지구당 부활' 법 개정: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활동력 제고
- 당 조직 재정비(정책국의 역량 강화, 교육역량 강화)
 - 여당 시절 정책국은 쉬러 오는 곳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 당료들의 정책역량 강화해야 하고, 가장 유능한 인재들 정책국으로 배치.
 - 연수원 마련하고 국회의원과 당료들의 이념·정책교육 강화
- 당내 권위주의 문화 사라져야
 - 의원들 간, 의원과 당원들 간의 관계 권위주의적 → 동지적·우정적 관계
- 비도덕적인 정치꾼의 배제
 - 해당행위자, (돈으로 정치하는)정치꾼, 파렴치범 전과자

○ 공천제도 재정비

- 본선경쟁력 약화시키는 일률적 상향식 지양
- 지역별 맞춤형 공천
 -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상향식과 전략공천의 적절한 조합
 - 조기공천 완료(최소한 3개월 전)

5. 외연(지지세력)의 확대

○ 우파정당의 통합

- 당대당 통합(자유한국당 + 바른 정당)
- 개별입당을 통한 통합
- 헤쳐 모여 → 새로운 당명 하에(100년 가는(예: 혁신보수당))

○ (보수)우파단체의 부활과 적극적 협력: 전문가집단, 풀뿌리시민단체

- 우파지식인단체: 우파지식인 운동, 우파종교인운동

- 과거 뉴라이트운동, 선진화운동의 맥을 잇는 혁신보수운동(예: 책임과 헌신, 하나의 한국).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분야별 지식인운동이 생겨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우파 풀뿌리시민단체

- 과거 초기경실련, 시대정신, 뉴라이트전국연합, 2007국민연대,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맥을 잇는 우파 풀뿌리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최근 새한국국민운동(서경석목사)을 비롯해서 새로운 우파 풀뿌리시민운동의 태동이 감지되고 있다.

■ 궁극적으로 우파지식인운동이 보수의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이 우파풀뿌리시민운동과 결합될 때 보수살리기가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보수정당을 압박하고 후원할 때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이 다시 재건되어 민노총, 전교조, 좌파시민단체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는 좌파세력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 (전향한)좌파시민단체 출신과 운동권 세력의 적극적 영입

- 전향한 좌파시민단체 출신
- 전향한 386세대 출신
- 90년대 이후 운동권세력 대표

○ 청년세대와의 교류

- 대학생 정치아카데미 운영 → 졸업자 인센티브 제공: 당의 인턴/정규직 채용, 선출직 의원 후보군
- 대학생 토론클럽(cf. 옥스퍼드유니온, 캠브리지유니온) 운영
- 대학생·청년근로자들과의 주말 운동(축구단, 족구단, 배구단, 배드민턴단, 야구단, 농구단,...)
- 당 지도부의 길거리(젊은이 광장, 대학교 앞, 지하철역) 청년당원 모집
- 전당대회와 당 행사에 대학생대표 연설자 초청 - 유럽에선 정당을 업고 학생회장 출마 - 선진국들, 대학생시절부터 제대로 된 정치연습 시작 ↔ 한국 대학의 경우엔 좌파운동권학생들의 정치연습만 작동.

- 전국적, 지역별, 대학별 ‘젊은 보수(Young Conservative)’ 육성
-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의 실상을 알려주는 책자(가칭 “청년들아 각성하라”) 집필
 - 세계와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파경제와 좌파경제의 발전상 비교
 - 연금개혁 안하면 청년들의 고통이다
 - 포퓰리즘 사회복지 확대는 청년들의 세부담이다
 - 노동개혁, 임금피크제 안하면 청년들 취업 못 한다
 - 강성노조 개혁 안하면 청년일자리 없어지고 비정규직 계속된다
 - 공공부문 성과평가제, 성과연봉제 안하면 청년들 혈세로 적자 메꾸어야 한다
 -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청년 일자리 줄인다.
 - 무분별한 평준화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한국경제의 후진화로 귀결되고, 결국 청년 기회 박탈된다.

○ 노조세력과의 진정한 교류

- 한노총과의 연대, 한노총 출신 “젊은” 의원 영입
- 민노총출신의 “젊은” 의원 영입
- 우파노조 재건
- 비정규직과의 적극적 소통

○ 문화세력의 우군화

- 문화세력은 근원적으로 좌파성향을 띠는 경향이 강하다(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스토리가 주요 주제) →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끌어안는 것이 필요
- 우파 문화세력을 지원하여 우파친화적 문화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
- 대중문화인들을 선거 때만 활용하고, 그 후엔 돌보지 않는 소모품 취급하는 행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특히 아이돌 세대를 포함한 젊은 대중문화인들과의 적극적 교류가 필요하다.

-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
 - 매번 선거 때마다 여성 공천지분 약속했으나 미실현(지역구 출마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의 부족 → 비례대표로 충원)
 - 여성단체, 시민단체, 법조계와의 적극적 소통으로 유능한 여성인재 발굴.
- 호남 끌어안기
 - 5.18정신의 계승 천명, 국민의 당과의 연합, 당 지도부와 공천에서 호남지분 증가

V. 맺는말

- 정당의 목적은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부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 200년 가까이 하나의 정당으로 유지되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보수정당인 영국 보수당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박지향(2017), 「정당의 생명력: 영국 보수당」). 현재 우리 보수정당은 어떠할까?
 - (1) 결속과 충성심 (X)
 - (2)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X)
 - (3) 국가경영능력(특히, 경제와 안보) (?)
 - (4) 애국주의 정당의 이미지 (?)
 - (5) 대중조직과 선전 (X)
- 성공적인 정당을 위한 국가경영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Kevin Hickson(2005), 박지향(2017)에서 재인용). 현재 우리 보수정당은 어떠할까?
 - (1) 성공적인 당 운영 (X)
 - (2) 승리할 수 있는 선거전략 (X)
 - (3) 정치적 논쟁에서 헤게모니의 장악 (X)
 - (4) 정권 잡은 후 정책실현 능력 (?)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토론회 II
무엇을 지키고 개혁할 것인가

토론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오형규 (한국경제 논설위원)

한국적 보수주의 패러다임의 재형성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

I. 보수 재건론의 허와 실

1. 개혁적 보수 정립론

1) 보수의 가치와 정당의 재건을 위해서는 개혁적 중도 보수를 지향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보수는 경직화, 우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 쪽으로의 이동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위성과 타당성을 지닌다. 패권적 계파 갈등으로 얼룩진 보수정당의 쇄신 노력도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2) 그러나 보수 가치의 막연한 중도화가 진정한 대안인지에 대한 논리성에 한계가 있다. 2012년 대선에서 이미 정략적 중도화(좌클릭)를 통해 승리한 새누리당의 경험 때문에 현재의 중도화 개혁이 설득력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수 가치의 재정립 즉 보수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일시적 임의적 개혁 노력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뿌리 깊은 권력지향적 계파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2. 진영 재건론

1) 자유한국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회복하여 당의 단합과 정치 투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게 대두되고 있다. 보수의 위기는 좌파세력의 준동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수도 좌파와 같이 이념적으로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를 위해서 성공국가를 건설한 산업화 세력의 공헌을 높이 받들고 개인적 정치이익에만 함몰된 “철학 없는” 정치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고 있다.

2) 그러나 이와같은 강경보수 재건론은 분열과 배제의 정치를 확대 재생산하고 미래 지향적 정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수의 정통성과 적통성을 회복하려는

논리일 수도 있으나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에 서 이미 경험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다. 이러한 처방은 그동안 보수 진영을 이탈했거나 방황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을 더욱 소외시킬 것이며 보수의 분열과 축소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오히려 다당제체제 하에서 자유한국당을 극우정당으로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보수 패러다임 재형성론

1) 기존의 한국 보수의 패러다임은 한국적 정치현실과 분단의 역사로 인해 보수주의 본류로부터 왜곡되어 정착하게 되었다. 한국 보수주의는 산업화 시대의 개발국가에 가치를 두는 국가주의적 보수와 세계화 조류와 함께하는 신자유주의적 보수가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주의적 보수는 국가와 성장 제일주의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지닌 반면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보수는 시장과 개인 우선주의로서 반국가주의적 고전적 자유주의를 현대화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모순된 보수 이념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념적 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따라서 동원되기 일쑤였다. 이와 같은 보수의 불편한 동거는 1990년 3당합당으로 보수대연합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국가주의 보수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산업화 시대로의 복고정치가 시작되었고 보수의 분열이 표면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2) 따라서 보수의 재건은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온전한 궤도에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주의적 또는 왕정 복고식의 보수주의는 권위주의적이고 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극우 성향을 띠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보수주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서 이미 그 폐단이 드러난바 있다. 자본주의 4.0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인도적 자본주의가 미래 방향이다. 서구의 보수주의는 오래 전부터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 요소를 수용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에 따라 국가주의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적실성을 상실했으며 신자유주의도 소득의 양극화와 계층의 구조화 심화로 그 당위성이 손상되었다. 한국의 보수 패러다임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시대적 상황에 처한 것이다.

II. 보수주의 가치의 한국적 적용

1. 전통

1) 보수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보존을 위한 욕구”로서 전통의 덕목, 관습과 제도에 대한 존중이다. 영국과 미국의 보수주의는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97)의 “보존을 위한 변화”(change in order to conserve)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19세기 서구 보수주의는 개혁을 반대하는 전제적 반동적 보수주의로부터 “하나의 국가”(One Nation)라는 온정주의적 기치 아래 사회개혁을 포용하는 개혁적 보수주의로 전환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 영국의 보수당은 케이즈적 사회민주주의(Keynsian social democracy)의 변형을 수용했으나, 1970년대에 그 실패 현상이 나타나고 뉴라이트(New Right)운동이 일어나 1980년대 영국은 대처리즘(Thatcherism), 미국은 레이건이즘(Reganism)이 등장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나자 영국 보수당은 중도 노선으로 변화하여 2010대선에서 승리했다.

2) 한국 보수가 보존해야 할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그 중 하나가 헌법적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인데 이것이 현실적인 적용과정에서 상당히 왜곡되어 나타나게 됨으로써 오늘날 보수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가 권위주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진전되면 될수록 그 정통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이라 함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의미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된 제도와 관습을 의미한다.

한국의 보수가 지켜야 할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급격한 변화와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한말 일본 식민주의에 의한 국가의 단절, 해방 후 분단과 정부 수립, 남북 상잔의 6.25전쟁,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 등은 전통적 가치와 경험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장애요인이 되었다. 역사의 지속적 단절과 전통적 가치의 부재로 인해 보수든 진보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회통합이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반공이 유일하게 보수 진영의 일관된 가치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간주되고 있으나 이 또한 국가주의적 보수가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슬로건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진보, 보수 모두가 합의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사회통합이념으로서 기능한다.

미국 보수와 진보는 오로지 이를 어떻게 잘 실현할 것인가의 방법론만 가지고 논쟁 방법도 실용주의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통합이념의 부재로 인해 이념논쟁은 체재 논쟁에서부터 정책논쟁에 이르기까지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념적 대립이 첨예화되면 될수록 보수가 전유할 전통적 가치는 정통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회통합이념을 개발하는 것이 될 것이며 여의치 않으면 그에 근접하는 이념이라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전통적 가치를 개발하고 체계화시킴으로써 보수 재건이 가능하다. 이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개혁적 보수의 의지를 가지고 중도화를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수가 전통을 존중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사회적 역사적 소속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덕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부인하거나 좌파 색깔론과 음모론을 주장한다면 그동안 확립되어온 헌법적 제도를 부정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결국 보수의 우경화 내지 극우화의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보수가 추구하는 전통의 보존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모순을 범하게 될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전통 가치를 모두 포용할 때만이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그들로부터 지지받을 것이다.

2. 실용주의

1)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문제해결 방법은 실용주의이다. 실용주의는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성이 있는 목표와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는 믿음과 태도이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추상적인 원칙이나 사상체계를 배격한다. 보수주의는 이념이라기보다 하나의 마음의 상태 또는 생활에 대한 접근방법이라고 표현하기를 원한다. 보수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때문에 실용주의적 접근방법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비이성적이고 이기적이며, 의존적이고 안전 추구욕이 강하고 권력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질서 유지를 위해 강한 국가, 엄격한 법 적용과 강한 징벌을 강조한다.

2) 한국의 보수는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념적으로 경직화되고 교조화되어 가고 있다. 과거에는 진보세력들이 그러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전략적 융통성을 발휘하여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4.13총선 과정에서 중도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탈권

위주의적 소통행태에서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주의 리더십은 좌파뿐만이 아니라 보수세력 내에서의 비박계 인사들에게 까지도 불포용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한국 보수의 경직화와 우경화는 진보세력과의 대결보다도 자체 내의 분열과 배제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7년 대선 때까지만 해도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 두 보수 세력은 대연합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친박 공천 학살이 자행되면서 보수의 분열이 시작되었으며 2012년 공천과정에서는 역으로 보복 공천학살이 전개되었다. 2016년 4.13총선 공천과정에서는 정권 재창출용 패권적 공천 파행이 저질러지면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결국 대통령 탄핵 문제로 분당까지 현실화된 것이다. 한때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내세웠으나 말뿐이었고, 전략적으로 좌클릭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교체의 의미를 가지고 당선되었지만 이 또한 공약과는 다른 길을 가게된 것이다.

3. 권위

1) 보수주의는 “위로부터” 권위가 행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식, 경험, 교육 등이 부족한 대중들을 위해서 리더십은 중요한 덕목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권위와 리더십은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길러 질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사회 유기체론과 위계 질서론에서 비롯된다. 사회는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이 공통된 문화와 가치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사회적 위치나 지위는 자연스럽게 계층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화로운 사회 유지를 위해 상호 호혜적인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며 그것은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기꺼이 수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2) 한국의 보수주의는 권위보다 권위주의에 천착되어 있다. 정부 수립에서부터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가 오늘날 보수주의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권력 남용과 지대 추구(rent-seeking)의 국가주의를 탄생시켰다. 오래 동안 권력을 장악해 온 보수는 보수의 중요 가치인 법치주의를 통한 강한 국가를 만들기 보다는 폭력 사용을 통해 강한 국가를 만들어 왔으며 스스로 법치를 위반하는 행태를 자행해 왔다.

권위와 권력은 다른 것이다. 권위는 국민들이 권력을 행사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내면적으로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정농단을 하면 권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권위주의는 일반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며 주로 지대 추구 형태로 자행됨으로써 정경유착의 결과를 초래한다. 정경유착은 한국 보수주의의 대표적 폐단이며 보수주의의 원천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배한 것이다.

또 하나의 폐단은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력 남용에 대한 무책임은 물론이고 지대 추구에 대해서도 당연한 관행처럼 인식한다. 보수주의의 근본 가치인 상호 호혜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몰인식하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 새누리당의 실패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오로지 좌파의 음모와 기울어진 운동장 탓만을 하고 있다. 보수의 몰락은 근본적으로 권위의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되었다. 권력 남용, 부정부패, 무책임성이 기득권층의 상징처럼 되어 온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흙수저-금수저 논쟁에서 나타나듯이 기득권층은 오랜 세월 특혜만 누려왔을 뿐 보수의 중요 가치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사회적 계층화가 구조화되어 사회적 이동성이 고착되면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불가피하다는 19세기 영국의 현명한 보수주의자들의 예언이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계층의 구조화가 되면 될수록 보수의 위기도 구조화될 수 있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보수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재산

1) 보수주의에 있어서 재산은 사활적 가치이다. 재산은 개인의 자유와 안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재산 소유의 상태가 개성의 외적 표현이라고 할 정도로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재산 소유권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에게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중요하며 재산 소유권 보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존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재산 소유권 행사에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수반된다.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을 받든 앞으로 획득할 할 재산이든 간에 소유자는 단순한 관리자(custodians)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에서는 재산의 사회적 의미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금과옥조로 여긴다.

2) 한국에서는 재산의 공동체적 소유(communal possession) 관념이 전혀 없다. 사유재산에 대한 관념이 별로 발달하지 못한 사회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 재산의 축적과 사용에 관한 한 거의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와 취향에 따라 행사되며 사회적 배려 없이 범법과 편법적 행동을 자행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자일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기득권층의 특별한 반성과 성찰도 없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삼성의 뇌물죄 재판은 상속세와 관련된 것으로서 재산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전무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부자가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인도하는 사회적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타적인 마음에서라기보다 사회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기적 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이라고 서구의 온정적 보수주의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도 일반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생각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Ⅲ. 개혁적 중도 보수주의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보수-진보-보수-진보의 정권으로 이념적 교차 진동을 해왔다. 현재까지 대체로 10년 주기로 이념적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아서 아무리 보수가 몰락해도 10년 후에는 재집권하겠지 하고 안주하면 보수는 더욱 몰락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분열되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다른 보수정당이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수의 위기는 보수정당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보수 전체의 위기이다.

따라서 보수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보수주의가 극단화와 경직화되는 경향을 막고 아울러 신자유주의적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한국적 보수주의 패러다임을 건설해야 한다. 기존의 한국 보수주의는 서구의 보수주의 아이디어만 수입했을 뿐이고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권위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의 부정적 요소만이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하나의 결정적 실수는 시대변화에 따라 진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적으로 전개되면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환골탈태의 변화를 위해 보수주의의 본래 가치에 충실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치유하고 국민 정서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한다. 그것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온정적 보수주의에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문제도 해결도 눈 앞에 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I. 국회선진화법부터 고쳐라

민주주의는 협치가 아니라 과반의 지배다. 이 기본적인 인식조차 한국의 보수정당에서 흔들렸다. 국회선진화법은 과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보수 개혁은 원칙에서 벗어나 변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칙에서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의원내각제 국가는 총선에서 제1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연정을 통해 과반을 만들어 정부를 구성한다. 프랑스 같은 대통령제 국가는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과반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1차 투표에서 1, 2위 득표를 한 후보자만 2차 투표에 진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의원내각제 국가나 대통령제 국가나 실행 방식은 다르지만 민주주의는 과반이라는 사고방식은 같다. 멀쩡히 과반을 갖고도 연정 협치 운운해 민주주의 개념에 혼란을 초래한 것이 새누리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혁입법에 실패하고 탄핵을 맞는 먼 원인은 국회선진화법에 있다. 민주주의는 과반의 지배를 인정하되 그 지배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실종된 것이 바로 책임정치다. 자유한국당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희생적으로 국회법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여당이 소수정당일 때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

II. 친박 문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친박의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총선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지금의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을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통령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과 권력적 기반으로 인해 주어진 헌법적 기능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헌법 하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국회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 이후 불법 정치자금은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

령이 국회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상도동계 동교 동계처럼 정치자금을 기반으로 한 계파는 아니지만 친노, 친이, 친박이 생겼다. 친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친박 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지역주의에 있다. 새누리당 친박 의원이 경북 대구 지역이나 수도권 부유층 지역에 공천됐을 때 그것은 선거 없이 당선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반(反)민주주의적이라고 느꼈다. 박 전 대통령이 강력한 TK지역 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한 반발이 나왔다.

친박의 문제는 결국 국민의당 호남 출신 의원들의 문제와 같다. 낡은 구정치적 행태가 새누리당에서는 당내에서 작동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밖으로 나와 ‘안철수’와 교묘한 결합을 했을 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비밀스런 관계에서 시작됐다. 친박이 알 수도 없었고 개입할 수도 없었다. 친박에서 탄핵사태를 책임지라고 하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친박은 지역주의 청산이라는 민주주의의 더 높은 차원에서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Ⅲ. 바른 정당 문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움직이는 심리적 동력은 콤플렉스다. 군사정권 시절 집권당 의원, 사학재벌, 기업가로 잘나가던 아버지에 대한 외디푸스 콤플렉스다. 아버지 덕분에 정치의 길에 성공적으로 들어섰으나 이제는 아버지 편이 받는 비난은 받기 싫다. 어린 시절 누릴 건 다 누리고, 적당히 유학도 갔다 와서 정치적 공명은 얻고 싶은 것이다. 이들의 보수는 치열한 삶과의 대결이나 치열한 지적 탐구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남경필 김세연 등이 서구에서 연정이나 협치가 왜 하는지도 모른 채 국회선진화법에 앞장선 것이다.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의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파동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 유승민 의원은 여전히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닌다. 그것은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의 본질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다. 민주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끼워넣은 계약에 속아넘어

간 뒤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보수는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른바 합리적 보수는 결정적인 자기증명의 사안에서 합리적이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에서 수사도 되지 않은 뇌물죄가 소추사안에 들어가는데도 찬성했다. 겉멋만 들고 눈치만 보는 보수, 순풍에는 그런대로 흘러가지만 역풍에 맞서 뚫고나갈 의지도 능력도 없는 보수가 보수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IV. 국정농단과 탄핵 백서를 만들라

지금 보수의 위기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서 시작됐다. 위기의 극복도 이 문제를 원칙에 맞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에 달렸다. 최순실의 각종 민원에 해결사 역할을 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분노를 자아낸다. 그럼에도 어디까지가 정확히 국정농단인지, 탄핵에 이른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무리한 절차는 없었는지 복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불필한 자해성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탄핵 정국에서 최소한의 게이트키퍼도 거치지 않은 의도적인 왜곡 보도가 쏟아졌다. 어떤 보도들이 그러했는지, 그런 보도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과거 신문과 지상파 방송 뉴스만 있던 언론 상황에 비해 지금의 언론 상황은 복잡해졌다. 포털에서 수시로 뉴스가 올랐다가 내려지고 종합편성채널에서는 하루 종일 시사보도가 쏟아진다. 지금 시점에서 당시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복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한 두 명의 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연구소 같은 기관이 동원돼야 할지 모른다.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이고 올바른 여론정치를 위해서는 올바른 보도가 유통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탄핵소추를 결의하면서 수사도 안 된 뇌물죄를 집어넣었다. 국회는 사후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검을 가동시켰다. 헌법재판소는 뇌물죄 부분을 기각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는 탄핵심판 중 바꿀 수 없도록 돼 있는 뇌물죄라는 법률위반을 헌법위반으로 바꾸도록 허용함으로써 스스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가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이라는 코미디 같은 사실은 뇌물죄를 기각하든가 인용하든가 양자선택을 피하려는 꼼수에서 나온 논리다.

특검은 뇌물죄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장담했지만 박 대통령 공판이 절반 정도 진행

된 지금까지도 뇌물죄의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뇌물죄 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고 박영수 특검이고 윤석열 검찰이다. 이것이 지금 불명확해지니까 정권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것이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 발표, 정유라의 보쌈 증언에 이어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민정수석실 문서 공개다.

보수는 뇌물죄 유무죄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만 엄밀한 증명 절차를 통해서 유무죄가 인정될 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유죄확신의 언론 보도들을 비판하고 특검과 검찰과 정권의 무리수를 어떻게든 막고 판사들이 정권과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채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각종 강요 행위는 그것만으로 탄핵사유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보수라고 말할 수 없다.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다만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과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보수다운 자세다.

보수정당을 위한 제언

오형규 (한국경제 논설위원)

■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착각

1. 공천 파동이 없었다면 총선에서 이겼을 것이다?
2. 국정농단이 없었다면 대선 결과를 몰랐을 것이다?
3. 현 정권이 헛발질하면 차기 선거는 승산 있을 것이다?

보수는 1990년대 전교조 등장 이후 20여년 간 이념 지형의 소리 없는 변화를 등한시했다. 학교, 대학, 문화, 영화,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저울추가 확 기울어진 것을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한 대가가 오늘날 보수정당의 몰락이다.

“지식이 지력이 되고 그것이 신념이 되려면 최소 20여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로널드 레이건 평전)

“적절한 변화의 방법을 갖지 못한 국가(정당)는 그 스스로 보존의 수단을 갖지 못할 것이다”(에드먼드 버크)

■ 보수우파가 공유할 만한 지적자산이 있나

좌파라면 누구나 한번쯤 접했을 지적 세례 과정이 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전환시대의 논리>,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같은 책들을 탐독했다는 공통의 경험을 갖는다. 근래 들어서는 <변호인> <광해> <베테랑> <내부자들> 등의 영화를 통해 끊임없이 사회와 권력의 부조리를 형상화하고 젊은 세대에게 각인시킨다. 좌파는 직접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통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렇기에 서로 충질을 철저히 자제하고 피아를 확실히 구분한다.

반면 보수우파는 누구나 한번쯤 읽어본 공통분모가 되는 책이 안 보인다. 우파가 공

유하는 지적자산이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가. 그렇기에 우파는 각개전투(자신의 안위와 영달)에 능하지만 이념 대결에서는 백전백패다.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데도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겨우 운영하던 우파 잡지조차 폐간하고, 애국영화 한편 만드는데 온갖 고초를 겪고, 교과서에 갖은 폭력이 가해져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자신이 신봉하는 가치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치시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다.

■ 우파는 공부를 안 한다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의 단상

“강남 교보문고에서 자주 마주쳤던 아우디 타고 다니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 외제차 탄 사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은데, 책을 양손 가득히 사들고 가는 그들은 정말 무서웠다. 돈 있으면 골프장이나 립살롱 가지 왜 교보에는 왜 자주 오고 난리야. (...) 한국의 우파들은 1주일에 세 번 골프장 가고, 두 번 립살롱 가느라 아주 스케줄 표가 짹짹 찐다. MB와 함께 청와대 들어가거나 내각 꾸린 사람들은 최소한 독서와 음악, 영화감상 같은 거랑은 아예 담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 9시 뉴스 할 때면 전부 립살롱 가있거나 술을 마신다고 한다.”(〈1인분 인생〉 중에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번역본을 찾아보면 완역자가 마르크스 전공 교수뿐이다. 이런 척박한 지적 풍토로는 좌파의 조롱거리일 수밖에 없다. 좌파는 무능하고, 우파는 부패하다고 하지만 지금의 우파는 부패하고 무능하면서 무지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공부하지 않고선 정권 창출도 없다.

■ 청년을 포기해서는 정당의 미래도 없다

최근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뽀뽀함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좌우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게 청년들의 시각이다. 인터넷 댓글이 여론의 전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난 정부와 비교해 하나도 다르지 않다. 청문회 20년을 거치며 성공한 어른, 기성세대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이 청년들에게 깔려 있다.

20~30세대는 확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청년들이 보는 기득권은 우파와 좌파가 크게 다르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좌파 운동권의 마초이즘, 권위주의, 엘리트주의 등에 좌절한 청년들도 많다. 물론 이들이 당장 중도나 우파로 전향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 하지만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아지기만 바라는 정당에는 표를 주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청년들의 대북관은 기성세대가 우려하는 것과는 다르다. 종북세력이 파리를 들고 있다 해도 이젠 그쪽도 고령화를 고민한다. 밀레니얼 세대가 자라면서 보아온 북한의 실상은 한마디로 ‘찌질함’ 그자체다. 촌스런 표정과 옷차림, 과장된 말투, 위선과 과잉 충성 등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이다. 개그콘서트에선 북한 사회의 찌질함이 단골 소재다. 안보의 가치는 여전하다. 하지만 이제는 보수정당이 결정적인 비교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다. 후보를 내도 최소한 군대 다녀온 사람을 내야 한다.

■ 반드시 지켜야 할 보수가치

헌법 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수 스스로 방기한 측면이 있지 않나 반성할 필요가 있다. 헌법 119조 1항이 아니라 2항을 진보정권도 아닌 보수정권이 내세우면서 이념의 아노미가 일어났다. 보수정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발의자만 가리면 민주당 법안과 하등 차이가 없다. 18대 대선 승리가 경제민주화 덕이었다는 것은 결과를 확인한 뒤에 나타나는 사후확증 편향일 뿐이다.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유권자들로선 그나마 덜 나쁜 대안을 선택했을 뿐, 좋아서 찍은 게 아니다. 또한 보수가 지켜야 할 법치도 무너져 버렸다. 무력한 공권력이 그 상징이다. 보수정당의 근본위기는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다 무너진 데 있다.

일각에선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가 13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사례를 들어 유연한 보수를 주장하지만 이 역시 일면의 관찰일 뿐이다. 영국 보수당은 기본 이념은 지켰다. ‘이념의 유통업’이라는 정당이 선택받으려면 파는 물건(이념)이 확실해야 한다. 좌파정당과 경제민주화 경쟁이나 하는 모호한 정체성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기대할 순 없다. 중심이 확실해야 유연할 수 있지, 중심도 없이 그때그때 대중적으로 대응하면 기회주의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 보수정당이 살 길

문재인 정부의 실패나 헛발질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제는 턱어라운드 하고 주가도 뛰고 있다. 먹고사는 일에 큰 문제만 없다면 보여주기식 이벤트로도 인기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지금 벌이는 이벤트의 비용은 한참 뒤에나 청구될 어음이지만 인기는 현찰이다.

그러나 여태껏 좌파 경제정책으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세상은 관념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바탕위에서 개선하고 개혁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실력 있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 거대담론보다 생활정치를 지향할 필요도 있다. 필요하다면 당원들이 주 1회라도 거리청소에 나서고, 불량 청소년 선도도 하고, 노인들과 저소득층을 위로하며 진정성 있게 몸을 낮춰야 한다. 중산층에도 강남 좌파가 많지만 이념으로 무장한 게 아닌 패션좌파에 가깝다. 보수가 촌스럽고 꼰대스러워서 그렇다고 한다. 이점은 청년도 마찬가지다.

보수의 가치는 자율과 책임, 원칙과 실질, 절제와 배려에 있다. 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보수는 그야말로 수구일 뿐이다. 즉, 나의 절제와 배려가 타인의 희망과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진정한 보수다. 하지만 그동안 당이 보여준 이미지는 타인이 아니라 본인의 희망과 기회만을 추구한 듯하다. 선거 패배 후에 단 한명의 정계은퇴도, 불출마 선언도 없다. 절박성이 없거나, '나는 예외'라는 심리로 읽힌다.

좌파 정권이 벌이는 정책 뒤집기 행진을 오불관언으로 방치하면서 과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대안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보수의 위기는 보수정당의 위기이지, 보수 시민의 위기가 아니다. 보수정당의 구성원들이 보수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체화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위기다. 득표전략, 선거공학에 급급해서는 미래가 없다. 보수가치를 굳건히 세우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것만이 보수정당이 살 길이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